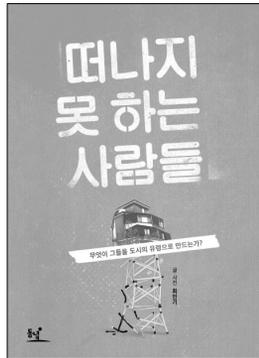


도시공간에 대한 권리는 누구의 것이어야 하는가!  
『떠나지 못하는 사람들』(동녘, 2014)

유광철\*



1. 들어가며

자본의 논리에 의해 공간 향유에 대한 권리가 침해당하는 사례는 사실 강제철거 등의 극단적인 경우가 아니더라도, 일상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도시공간의 대부분은 자연공간이라기 보다 건조환경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부분의 건조환경은 사적으로 소유되어, 대중에게는 배타적, 조건부적으로 개방되고 있다. 공간 역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일 뿐만 아니라 이를 점유하는 배타적 권리를 통해 가치를

---

\* 서울시립대학교 도시행정학과 석사(yookwang1234@naver.com)

창출할 수 있는 중요한 자본재로서 기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또한 중요한 것은 ‘상품’으로서의 공간 이전에, 일상생활의 터전으로서 점유하는 공간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떠나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도시공간의 점유에 대한 권리를 누가 갖는 것이 합당한 것인가에 대해, 여러 사례를 통해 문제를 제기하며, 주로, 주민의 삶의 터전으로서의 ‘생활공간’에 대한 권리를 옹호하는 관점을 취하고 있다.

저자의 현장에서의 수많은 활동과 답사 경험을 통해 ‘대도시 서울’에서 발생해온 소수자들의 공간에 대한 소외의 문제를 청계천 일대의 벼룩시장, 동대문운동장과 종각 인근의 노점상 상인들의 사례를 포함하는 역사 속으로 살아져 가는 도심공간의 모습, 상도동과 포이동, 용산을 대상으로 한 철거민들의 재정착지가 도시공간의 확산에 의해 개발되어 가는 과정, 서울역 인근의 노숙인과 청량리역 인근의 성노동자를 사례로 도시의 소수자들이 거주하는 열악한 공간에 대한 고찰을 다루고 있다. 또한, 기존의 공간에서 배제되고 쫓겨난 사람들이 형성된 공간으로서 문정동의 가든파이프와 백사마을과 개미마을의 사례를 고찰하고 있다.

## 2. 공간의 점유에 대한 권리

공간에 대한 점유의 권리를 자본주의적 화폐경제에서 거래를 통해 획득한 권리가 중요할 것인지, 그럼에도 생활권으로서 공간에 대한 시민적 권리가 더 중요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약간의 논쟁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

1) 개인적으로 백사마을과 개미마을의 사례는 4장과는 별도의 장으로 구분하거나 오히려 제2장에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으나 싶다. 기존의 공간에서 강제적으로 배제당한 사람들에게 공여지책으로 배정된 공간이 상업시설개발의 기본적인 원리도 따르지 않아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는 것과 자연발생적으로 도시의 공유지를 점유하게 되면서 ‘공간에 대한 실질적 점유권’을 갖게 된 사람들은 의 미상 다소 구분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된다.

공간에 대한 배타적 점유의 권리는 재산권의 일부로서 헌법 제23조에 의해 보장되어 있다. 그러나 이에 앞서 제10조에는 행복추구권과 불가침적인 인간존엄권을, 뒤이은 제37조에는 헌법에 열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국민의 행복과 자유에 대한 본질적 권리가 경시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즉, 근로, 사업, 상속, 이전 등의 정당한 이유로 축적한 재산으로서의 공간점유에 대한 배타적 권리와 자연인, 생활인으로서 공간점유 및 향유에 대한 권리 중 어느 것이 더 우선적으로 존중되어야 하는지는 쉽게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자본의 계층 간 편중이 심화되는 상황 속에서 도시에 대한 권리, 생활에 대한 권리, 공간 향유에 대한 권리를 강조하는 논의들이 등장했다. 앙리 르페브르가 자본에 의해 지배되는 도시를 주민에 의한 도시로 변혁해야 한다는 ‘도시에 대한 권리’ 개념을 주창한 이래, 공간향유에 대한 자연권적인 권리를 강조하는 다양한 논의들이 나타나고 있다(강현수, 2009).<sup>2)</sup>

자본주의가 발생하기 이전부터 ‘도시공간’이 존재했었기 때문에, 도시공간에 대해서는 교환가치보다 사용가치가 중시되어야 하고, 피지배계층들이 ‘축제’로 표현될 수 있는 도시공간의 향유할 수 있는 권리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며, 또한, 도시민으로서 정치적, 사회적으로 공간적 의사결정체제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도시계획적 차원에서 점진적인 개선이 이루어질 수는 있어도, 기존의 재산권으로서 공간에 대한 점유권을 완벽하게 규제하는 일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기존에 도시민으로서의 공간향유에 대한 권리보다 재산권으로서의 공간에 대한 소유권을 중시하는 제도가 ‘이미’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권리’ 간의 충돌이기 때문에, 기존의 권리자들의 반발과 주장을 논리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

2) 강현수, 『‘도시에 대한 권리’ 개념 및 관련 실천 운동의 흐름』, 한국공간환경학회, 《공간과 사회》 통권 제32호(2009), 42~90쪽.

어야 하는데, ‘이랬으면 좋겠다’는 식의 주장으로는 이미 형성된 자본주의적 질서를 역전시킬 수 없다. 나아가, 관련 사회운동들이 어설프게 전개될 경우, 기존질서에 순응해 살아온 영세 자본가들에게만 피해를 주는 상황 또한 초래될 수 있다.

동심원이론이나 선형이론, 입찰지대이론 등등의 신고전파의 도시공간이론의 기본적 가정은 지대지불능력에 따라서 입지가 가능하다는 것이며, 시장상황의 변화에 따른 지대상승에 대응하지 못할 경우, 시장에서 탈락해서 외부로 나가는 것(외곽<sup>3)</sup>이나 기타 도시로의 퇴거)은 당연하게 여겨지고 있다.

단지, 관심을 둘 수 있는 부분은 이러한 퇴출의 과정이 사람이 살고 있는 공간을 야간에 강제로 철거한다거나 화재를 부추기고 방조하는 식의 비인간적인 퇴거나 철거 과정을 두고 볼 수 없다는 것이지, ‘도시에 대한 권리’를 근거로 삼아, 사적 소유권이 존재하는 공간에 대한 자유로운 이용을 원천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자본주의라는 사회의 기본적인 틀이 유지되는 한, 도시권만으로는 근본적인 패러다임을 변화시키는 데 따른 또 다른 문제들이 나타날 것이라고 판단된다.

### 3.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

청계천 상인들, 종로의 노점상, 동대문운동장 주변의 상인들, 청량리 역의 성노동자들, 철거민 재정착지 등 퇴거 및 철거와 관련된 다양한 현장사례들을 다루고 있다는 점이 이 책의 최대 장점이 아니었을까 싶다. 이론만으로는 파악할 수 없는 현장의 절박한 이야기들이 존재하고, 사회적 차원에서의 세력화는 차치하더라도, 각자 개인의 상황과 입장에서 자

3) 물리적 공간으로서의 외곽이라기보다 중심성이 덜한 지점으로의 퇴출.

신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해주고, 이를 알려줄 수 있는 여러 통로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이들의 상당수는 옹호주의 도시계획이란 것이 바로 이러한 지점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특히나, 성노동자들의 생존권과 주변지역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권이 대립하는 지점은 시장적, 실질적 점유의 단순한 구분으로 바라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니며, 양측 모두 절박한 이해관계를 지니고 있다.

#### 4. 나오며

공간에 대한 시장적 점유와 실질적 점유.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를 유지해 가는 한, 시장적 점유가 더 존중받아야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된다. 지역의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보존해 가야 한다는 주장 또한, 이를 통해 발생하는 화폐화될 수 있는 공간의 자본적 가치를 고려한 것이고, 소유권자들에 대한 설득의 주요 근거는 보존 내지는 수복형 개발을 통해 창출해 낼 수 있는 공간의 시장가치가 될 수 밖에 없다고 본다.

다만, ‘합리적’ 도시계획에서 ‘합의적’ 도시계획으로 그 패러다임이 변화해 가는 상황 속에서, 피맛골 화재나 용산의 남일당 빌딩 참사처럼, 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을 경감하기 위해 사람의 목숨까지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으면 한다. 공간적 의사결정에의 참여를 도시민의 권리로서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도시공간에 대한 ‘전유권’이 소유권에 앞설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이러한 과정에서 정당한 참여주체로서의 권리는 충분히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

‘자본에 의한 공간개발과 그에 따른 실질적 점유주체의 퇴거’라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서 글을 진행했는데, 사실, 『떠나지 못하는 사람들』에는 이보다 복잡한 구도로 이해되어야 할 여러 유형의 이야기들이 다루어져 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책의 전반적인 구성에 대해 한 가지

문제를 제기하자면, 앞부분에 한 챕터 정도 공간에 대한 이론 고찰을 통해서 사례에 대한 이해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남는다. 비전문가나 각 사이트에 대한 지식이 많지 않은 사람이 읽었을 때에, 책 전체를 관통하는 저자의 메시지가 무엇인가에 대해 파악하기 어렵고, 그냥 저러한 일들이 있었구나 하는 흥밋거리 정도로 넘겨버릴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깊은 가치를 지니는 이유는 책이 ‘현장’의 사례를 다루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장소에 대한 ‘실질적인’ 지식은 바로 ‘그곳’을 경험한 사람에게서만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